

데스크 시각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법적 활동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18 진상 규명을 위해 2019년 12월 출범한 진상조사위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컸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린 자, 헬기 기총소사,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수백 명 시민이 어디에 있는지 등 은폐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었다.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차질

그로부터 4년이 흘러 법적 활동 시한 마감을 앞둔 올해 진상조사위에서는 우려할 만한 소식들이 흘러나왔다. 지난 9월에는 진상조사위 핵심 간부에 대한 조사위 전위원회회의 사적권고 사태가 불거졌다. 준비되지 않은 청문회 개최 검토가 조사위 간부의 입을 통해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게 도화선이 됐다. 진상조사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고 결국 진상조사위는 “10월 청문회 개최설은 사실이 아니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심상치 않은 조짐에도 광주에서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한다’며 옹호했다. ‘광주마저 진상조사위를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사태가 복합될 수 있었다.

문제는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아직도 거둘 수 없다는 데 있다.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로 앞두고 진즉 이뤄져야 할 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아직

5·18 진상조사위의 역사적 책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진상조사위가 직권 조사하는 21개 핵심 사안에 대한 결과 보고서 채택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4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핵심 사안이 담겨야 한다.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행방 불명자의 규모·소재, 계엄군의 헬기사격 경위와 사격명령자 규명 등이다. 하나 같이 목직화 내용이다.

조사 결과 보고서가 진상조사위원회 심의에서 채택돼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대국민 보고회도 개최한다. 종합보고서에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다. 종합보고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정사(正史) 5·18이자 1980년 5·18 이후 40여 년만에 나오는 진상보고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이 2023년 상반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보고서에 대해 “5·18 진상규명이라는 국민과 지역민의 기대에 반하는 초라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연한 우렁고 비판이다.

진상조사위는 “위원회 활동을 마친 뒤에 모든 비판을 받겠다”, “아직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번 비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정작 진상조사위 집행부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 채택하는 진상조사위원회들은 고개를 킁는다. 일부 조사위원들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부실할 경우 채택을 거부하고 그 사유를 적시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부실 보고서를 채택해 역사에 오점을 남기느니 차라리 직무유기를 택하겠다는 의미다. 진상조사위원들이 격양한 것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진상보고서 초안을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서둘러 제출하라고 독촉해왔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시간을 부여해 치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자는 취지였다. 진상조사위가 차질피울 보고서

제출을 미루다가 정작 내용은 보고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법적 조사 권한의 종료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아 추가 보완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법적 조사 권한의 종료일은 다음달 26일이다.

진상조사위 소명의식 가져야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고 결과물로 내놓을 종합보고서는 5월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5월을 폄해하고 왜곡해온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먹잇감이 없을 게다. 자칫 부실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한다면 또 다른 왜곡과 폄해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달 열린 국회 국방위의 진상조사위에 대한 국감에서 한 여당 국회의원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고에 대해 공격을 했다든지, 아세아자동차 탈취라든지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된 논문을 쓴 지만원 박사 등을 정중히 모셔서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그가 언급한 지만원이 누구인가. 광주사람은 물론 5월 유가족이 치를 떠는 인간 아나기.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에 두둔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자 5월을 바라보는 극단적 시각이다.

진상조사위는 5월을 폄해해온 세력들까지 고개를 끄덕일 수준으로 5·18 종합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진상조사위가 5월을 폄해하는 그들보다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해야 한다.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할 시한은 앞으로 7개월이다. 진상조사위가 내놓은 5·18 종합보고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냉정한 것이다. 부디 진상조사위가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을 바란다.

은편칼럼



류동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여당한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로 연일 뜨겁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면 김포의 부동산 값이 오르고, 교통 편익이 좋아진다는 이유다. 김포시민들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시민이 된다고 여론이 들끓어는가보다.

서울 편입이 김포 하나로 머무는 기세가 아니다. 고양, 구리, 하남, 과천, 부천, 광명 모두 서울로 편입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으로 저수지 물꼬를 뜨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서울 인근 도시도 쏟아져서 서울로 급물살을 이루며 합해져 갈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돌이 결혼해서 0.78명을 낳는 수치로 세계 최저로 달려가고 있다. 수치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논문 말뚝만 떠고 나라가 거덜나고 있는데도 특단의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달려가면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가장 큰 원인은 젊은이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서울로 몰려가니

저출산 공화국 심화시키는 김포의 서울 편입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마음 편하게 아이 낳고 기정을 꾸릴 겨를이 없는 것이다.

출산율도 서울이 0.54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꼴찌라는 통계 수치는 이를 증빙한다. 전국 출산율이 0.78명인데 인구가 많은 서울이 0.54명이니 서울이 전국 출산율 하락에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율이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하면서 서울로 김포를 편입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는 개구리가 끓는 물에서 죽어 가고 있는데, 가스 레인지 불을 더 세게 켜면서 따듯하니 졸다가 눈을 감고 온수 찜질을 즐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울로 편입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서 좋다는 김포 시민들의 이야기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엔 부동산 가격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때 참패한 이유가 바로 수도권엔 부동산 값 상승 때문에 팔지 않는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기 힘들어 그 불만이 표로 표출된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김포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왜 김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가. 자가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니까 좋겠지만, 살고 있는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어차피 팔지도 못하는 데 세금을 오른다. 또 집 없는 서민들은 집 한 채 장만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도 낳기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필자가 가장 존경하는 동물은 달팽이다. 달팽이는 자기가 집 한 채를 이 지구상에 놓는 것이 미안하여 등딱에 짊어지고 다닌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 중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다른 집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본적이 있는가. 감히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는 여러 채의 집을 탐내며 스스로 공동체의 삶을 고담뜨게 만들어 자신들의 공동체를 존립하지 못하게 하는 저출산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켜 서울을 비대화 하는 정책은 초저출산을 삶의 경쟁력으로 삼아 살고 있는 서울의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해결 방안은 지역 거점 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지역 거점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 농촌지역과 도시가 산업적으로 유기적으로 연동하게 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이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의 효과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퍼지게 하는 것, 그것이 답이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초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액셀이 될 것이며 나중에 나라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는 후회해도 돌릴지 수 없을 것이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수도권 민심이 무섭다 하여 국가 백년대계의 큰 그림과 흐름을 무시하면 다음 대선과 역사 앞에 엄중한 평가에 직면할 것이다.

社說

희비 엇갈린 글로벌대학... 본 게임은 지금부터

정부가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에 순천대가 선정되고 전남대는 탈락했다. 교육부가 그제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전국 10개 대학을 발표했는데 지역에선 순천대가 포함된 반면 전남대는 고배를 마셨다. 글로벌대학은 비수도권 대학 육성책의 하나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곳을 선정해 한 곳당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지원 사업으로 대학마다 사활을 걸고 준비해왔다. 우리 지역에선 순천대와 전남대가 예비지정됐다가 순천대가 선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글로벌대학은 ‘자·산·학 협력 거점대학’이라는 말처럼 대학과 지역사회, 산업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다.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해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역 전라산업과 연계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평가의 핵심이었다.

전남 산지 쌀값 안정화로 농가 시름 덜어야

가을걷이를 마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 해 동안 땅벌에서 굶은 땅바람을 흘려가며 재배해 햅쌀을 수확했지만 쌀값이 기대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평균 산지 쌀값(80kg)은 21만 7552원이었다. 하지만 이달 11일 기준 예 암을 비롯해 해남, 강진군 등지 산지쌀 도매가는 18만 8000원 수준이었다. 정부가 지난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약속한 20만 원 선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만 원을 웃도는 경기도와 충청도와 달리 전남 지역의 쌀값 하락이 유독 심하다.

올해 전남 농민들은 유류비와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향후 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해 손실을 줄이려고 ‘올벼 겨자떡기’ 식으로 투매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

순천대는 그린스마트팜, 에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 등 전남의 3대 전략산업을 지산학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으로 선정을 이끌어 냈다. 전남도의 지원도 큰 힘이 됐는데 전남도는 순천대 발전을 위해 1349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순천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과와 학기의 경계를 허물고 교재가 없는 “3無”를 도입하는 학사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그러나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최종 선정됐다 하더라도 협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순천대는 실행계획서를 꼼꼼하게 수정 보완해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전남대는 대학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지역 사회와의 연계 작업이 왜 원활하게 작용하지 않았는지 파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내년에 한번 더 도전할 자격을 갖춘 만큼 뼈아픈 반성과 철저한 대비로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모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정부가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액을 나중에 ‘공익형 직불금’으로 보전해줘도 손실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정부에서 매일한 쌀의 공매를 중지하고, 공공비축미 용도의 벼 12만 톤을 시중에 풀지 않겠다는 등의 쌀값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남 산지 쌀값의 하락세는 여전하다.

정부는 전남 산지 쌀값을 안정화시켜 농가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 농민들은 정부가 정책적인 확신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농협 통합 RPC(미국 종합처리장)도 올해 추수한 햅벼 매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식사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쌀 수요 증가와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묘안 또한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인류가 야생동물의 가족화에 성공한 것은 1만 년 전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神)에게 ‘살아 있는 제물(祭物)’을 바치려는 종교 신앙에서 비롯된 듯하다. 가족으로 기르던 것을 식용으로 쓰러 수렵에 의존하는 생활의 불안정을 피할 수 있게 됐고, 차츰 의미가 역전돼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족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 개·돼지 등이 인간과 생활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공생 관계가 이루어져 가축화가 됐다고 알려져 있다. 최초로 가축화된 동물은 개인데 약 1만 2000년 전에 이미 가축

가축 전염병

장기의 결핵과 여일, 림프절 종대, 피부 부종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소의 급만성 바이러스성 질병

다. 마행인 것은 제1종 가축 전염병이지만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렘피스킨병까지 있던 가축 전염병 발생은 인간이 이기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면서 불러온 재앙이 아닐까. 지나친 산업화와 이에 따른 환경 파괴가 인간과 가축에게 전염병을 옮기고, 이전 반려동물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두려운 세상이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기고



최은모
광주전남기업협의회회장
(주)무진서비스 대표

지난 주 광주 자동차 부품업체 근로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당 부품업체는 조업이 중지됐다. 이 업체를 협력사로 둔 광주 기아차 공장은 연쇄적인 영향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3일 동안 문을 닫아야 했다. 본 사건과 광주 기아차는 무관했으나, 해당 중소기업의 부품 공급 끊어지는 자동차 생산 공정이 가동될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공장의 불이 꺼진 것이다.

다행히 지난 10일 광주시와 관련 당국이 긴급히 심의하여 조업 정지는 해제되었으나, 이미 사흘간 조업을 중단한 기아차는 6300대 분량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한다. 반도체와 더불어 매년 광주에 50억불이 넘는 달러를 받아주는 효자 종목인 자동차 공장이 사할

중대재해처벌법,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동안 가동을 멈추면 최소 수백억 원대의 수출 차질이 발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주체에 맞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엄정히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는 등의 실효성 없는 제도 시행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다.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취지와 무관하게 우리 기업의 수출에 이와 같은 차질을 빚게 한다면 현장 상황에 맞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연 600억 달러가 넘는 광주전남 지역의 수출을 견인하는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백색가전, 석유화학 등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기간 산업들이다. 그 뒤에는 우리 지역 내 소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1, 2, 3차 협력관계로 이어져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앞두고 있다. 제도의 보완 또는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대상 기업은 수십만 개로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이 중 한 곳에서만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산업의 불이 꺼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출 현장에서 바이어와의 비즈니스는 단 하루만이라도 납기에 차질이 생기면 자칫 거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용 리스크가 된다.

작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몇몇 공장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주요 공공기관에서 각각 일곱 번 넘게 찾아오는 일이 있었다. 이때 해당 공장들은 반복적인 조사와 동일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공장 조업이 중지되는 등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불 호남을 찾은 국무총리에게 광주전남기업협의회회장 자격으로 이와 같은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행정 당국으로부터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두 살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현장 상황에 맞게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옛 말대로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는 교각살우를 범하면 안 될 것이다. 아무쪼록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소중한 노동자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기, 우리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수출 현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의 시행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세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에 황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